

# Hansun Brief

발행일: 2016년 9월 21일(통권41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 자위권 강화를 위한 시급한 자강전략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 회장,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목차

1.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대한 무한질주
2. 핵·미사일 질주를 멈출 고장난 제동장치
3. 북핵 위협에 대한 자강전략
4. 한국의 핵무장은 북핵 포기를 강제할 수단

### 요약

집권 5년차인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프로그램의 무한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금년 들어 2차례의 핵실험과 실험 주기도 짧아졌다. 또한 북한은 핵탄두를 운반할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 북한의 이런 질주는 김정은 체제의 공격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체제의 예측불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동장치가 풀린 핵·미사일 질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자강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자강의 핵심은 자주적 방위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며, 1차적으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자강은 현대적 군비를 확충하는 군사전략적 자강뿐만 아니라 군 장병의 정신력과 국민의 단합된 힘을 발휘하는 정신적 자강의 결합물이다.

북한 핵 공격위협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핵우산 사용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핵우산 작동시간 소요로 인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런 핵우산의 '의구심과 무용(無用)' 때문에 새로운 전략방안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대안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핵무장이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충돌할 때 안보이익을 선택하는 결단과 국민적 단합이 요구된다.

미국과 중국이 NPT 체제의 와해를 우려 하지만 자의적 이중 잣대로 인해 오히려 핵확산을 부추겨 왔다. 직접 핵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에게만 NPT 체제를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자강의 이익과 동맹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강의 이익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북한비호정책의 포기를 유발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자위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한미공조를 통한 통치자금 차단과 북한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 1.金正은의 핵·미사일에 대한 무한질주

집권 5년차인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프로그램의 무한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하더니 북한정권수립일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했다. 1차 핵실험부터 4차 핵실험까지 3년 주기로 이뤄진 데 비해 5차 핵실험은 8개월 만에 이뤄져 그 주기가 짧아졌다. 그만큼 핵질주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의미다. 또한 북한은 핵탄두를 운반할 탄도미사일 개발도 서둘러 있다. 금년 8월까지 북한은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 성공은 충격적이었다. SLBM 발사성공은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해저에서 예측 불가한 시간에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최근 열차탄도미사일 발사대 제작 및 핵탄두 장착 어뢰 개발 등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는 9월 5일 중국 항저우(杭州) G-20 주요국정상회의 기간 중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은 더욱 과감해졌다. G-20 기간 중 미사일 발사는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비난에 동참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이후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핵질주 본능에 기인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도모했다. 이런 북한의 특대형 도발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임이 분명

하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는 김정은 체제의 공격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북한체제의 예측불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년 들어 2차례의 핵실험과 1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SLBM 발사성공 등과 같은 일련의 흐름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가속도가 붙었다는 증거들이다. 이런 질주의 가속도를 감안할 때 조만간 북한의 추가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5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지난 13일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출동에 대해 제17차 비동맹운동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은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있다”며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또 다시 6차 핵실험 우려가 대두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에 제동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예측은 9월 5일 미사일발사와 5차 핵실험 직후 김정은이 '핵무력 강화의 기적적 성과들을 계속 확대'를 천명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김정은의 핵·미사일 무력강화는 2013년 국가발전전략의 기조로 핵·경제발전 병진정책을 채택한 것의 연장일 뿐이다. 다만 특대형 추가도발은 시기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 2. 핵·미사일 질주를 멈출 고장난 제동장치

북한은 금년 1월의 4차 핵실험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다. 안보

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북한 스스로 핵·미사일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자금 조달원을 차단하는 각종 조치들이 포함됐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지금까지의 제재조치 중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은 제재결의안에 내포된 구조적 허점(structural hole)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무역에서 '생계형' 물자를 제재대상의 예외로 인정한 중국은 제재의 허점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구조적 허점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질주에 가속 페달을 밟도록 도와주는 주원인이다. 북한 대외무역의 대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핵·미사일의 전략물자가 생계형 물자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결의안 2270호 발효 이후 북한의 수출입물자에 대한 중국의 세관검색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벌써 '개별국가의 일방적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어떤 핑계와 구실로 제재의 구조적 허점을 만들어낼지 궁금하다. 이는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결의 과정에서 중국이 최대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은 명확해 보인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를 암묵적 지원 내지 방조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2003년 원심분리기의 주재료인 고강도 알루미늄관 수입 협력, 2013년 열병식 때 공개된 중국제 미사일이동식 발사대 수출, 파키스탄이 핵개발 물질을 중국회사 '베이징 선테크 테크놀로지'에서 구입해 북한에 우회제공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북한 구하기의 충실한 후원국의 역할을 해 왔다. 사실 중국은 북핵과 미사일을 제어할 다양한 수단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의 채찍보다 북한의 잘못을 비호하는 정책(庇護政策)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북핵문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중국의 북한 비호정책은 중국을 대신해서 미

국과 투쟁하는 북한에게 인적·물적·정치·외교적 지원을 조건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배려차원의 보상이다. 또한 중국의 비호정책은 북한의 핵개발 방지라는 시대적 요청보다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산물이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 비호정책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면서 북핵문제는 난제가 되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는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북한 비호정책 → 북한의 핵·미사일능력 강화 →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 확산 가능성 증대 → 중국 주변국의 핵보유국 확대 우려와 같은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중국은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해 노골적 내정 간섭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북한의 강화된 핵과 고고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없다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다. 즉 북핵과 미사일 문제만 해결되면 사드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이런 전후의 사정을 무시하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 본말전도의 행태이다. 이런 행태는 아직도 한반도를 중국의 변방으로 여겨 한중관계를 군신(君臣)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북핵 위협은 국가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자위권 차원의 당연한 조치이다.

### 3. 북핵 위협에 대한 자강전략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 주위에는 4대 강국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웃한 강국들과 비교하면 작은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이웃 강국들은 항상 한반도를 유린한 것이 우리의 아픈 과거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종합국력은 다른 여타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런 국력에 걸맞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는 자강(自強)'이 요구된다. 즉 자강이란 '적어도 한국에 대한 공격이 이

익보다 손실이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릴 정도의 국방능력을 구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정수준의 국방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직·간접적 위협과 공격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자강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자강의 핵심요소는 자주적 방위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자주적 방위능력은 1차적으로 국방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국방력을 확보하는 것이 자강의 핵심요소이다. 여기서 국방력은 현대적 군비를 확충하는 군사전략적 자강뿐만 아니라 군 장병의 정신력과 국민의 단합된 힘을 발휘하는 정신적 자강의 결합물이다.

한국의 독자적 자강능력은 주변4강과 비교하면 열세이다. 스스로 안전보장을 구비할 능력이 부족하다. 부족한 자강능력은 한미동맹을 통해 안전보장을 확보해야 한다. 즉 동맹은 외부침입에 공동 대응한다는 약속을 통해 부족한 자강능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물론 동맹은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편함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감수하여야 할 비용이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한국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토대였다는 한미동맹의 안보적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통일 이후 중국과 일본에 의한 지역패권경쟁을 막는 제어장치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은 우리의 자강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만을 분명하다.

그러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폐해들도 나타났다. 바로 자강능력을 향상시키기보다 동맹에 의존하려는 '대국의존본성(大國依存本性)'의 확산이다. 한국의 국력이 비약적 신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국의존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국방인력들은 마치 외교관처럼 행동하면서 자위적 자강능력 확보보다 동맹에 의존하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국제정치현실에서 자강의

토대가 허약하면 동맹이 유지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자강을 먼저 고려해야 동맹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정권을 끝장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제는 핵을 보유한 북한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자위적 자강능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고민의 출발은 우리 스스로 자강능력을 강화시키는 대신 북한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는 것이다. 북한의 핵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자강패러다임은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기존의 재래식 무기의존 자강패러다임을 비대칭 무기 중심의 자강패러다임으로 방향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바로 한국의 핵무장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때 한국의 핵무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다. 자강전략에서 안보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안보이익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북한의 자강능력을 약화시킬 방법도 찾아 시행해야 한다. 독재자는 항상 핵심측근집단을 통치자금을 가지고 통치한다. 이를 위해 한미공조를 통한 미국의 제3국 제재(secondary boycott)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함으로서 김정은에게 유입되는 통치자금을 차단하여 김정은과 핵심집단의 분리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독재자는 자유를 몹시 싫어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해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확대시켜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보접근권 확대는 김정은과 주민들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 4. 한국의 핵무장은 북핵 포기를 강제할 수단

북한 핵으로부터 직접적 공격위협을 받는 국가는 한국이다. 이런 북핵 공격위협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의 핵전력을 이용해 한국의 안전보장을 유



지해 주는 전략이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은 한국의 안전보장에 소중한 자산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공격이 현실화되면 핵전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은 핵우산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공격 시간과 핵우산의 작동시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핵우산이 무용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핵우산 활동이 기상악화를 이유로 지연되고, 괌(Guam) 기지에서 서울까지 3시간의 비행시간을 감안하면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과 무용'에 대한 지적은 합리적이다. 이런 핵우산의 '의구심과 무용'이 밝혀진 이상 북핵 위협에 대한 새로운 전략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도이다. 바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자위적 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자강의 효율적 측면에서 핵무장이 전술핵 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NPT 체제에서 핵보유국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중 잣대(double standard)를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핵확산을 부추겨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이중 잣대는 이스라엘과 인도에 적용되었고, 중국은 북한과 파키스탄에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고 핵무장 불가를 외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이중 잣대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자강의 이익과 동맹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강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의 핵무장이 중국의 북한비호정책을 포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다. 사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핵을 포기하도록 다양한 압박수단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중국은 압박카드를 활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북핵을 미국과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방조 내지 협조해 왔다. 또한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런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의 촉발은 중국의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제이다.

한편 미국은 secondary boycott을 수단으로 중국을 통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미중간 무역분쟁 발생 우려 때문에 secondary boycott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제어하려면 중국에 대한 secondary boycott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이 미중관계에서 미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미국의 수세적 입장을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불리한 것만도 아니다.